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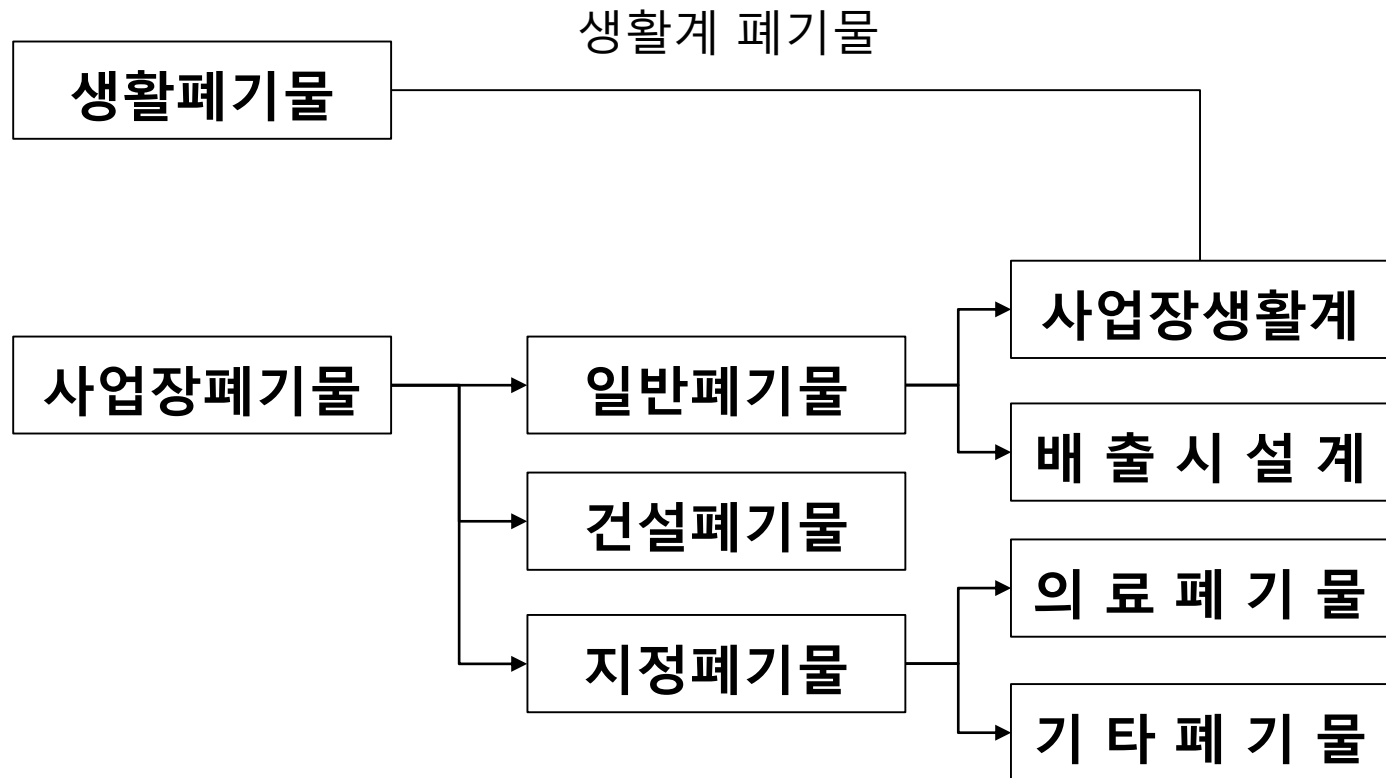
사업장폐기물 매립지관리 공공성 강화방안

홍수열 소장·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



1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

1) 폐기물 분류 ⇒ 배출원 기준 분류



1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

2)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

배출단계		처리단계	
발생억제	배출억제	재활용 우선	수입억제/국내처리
주변환경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		친환경적 처리 (양과 유해성 감소)	
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원인자 : 환경복원책임 및 오염피해구제비용 부담			

1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

3) 주체별 책무(폐관법 4조, 7조)

국가



-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,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노력
- 폐기물처리 기술개발지원, 지자체 기술재정지원, 지자체 사업조정

지자체



- 관할구역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파악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
-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술재정지원, 사업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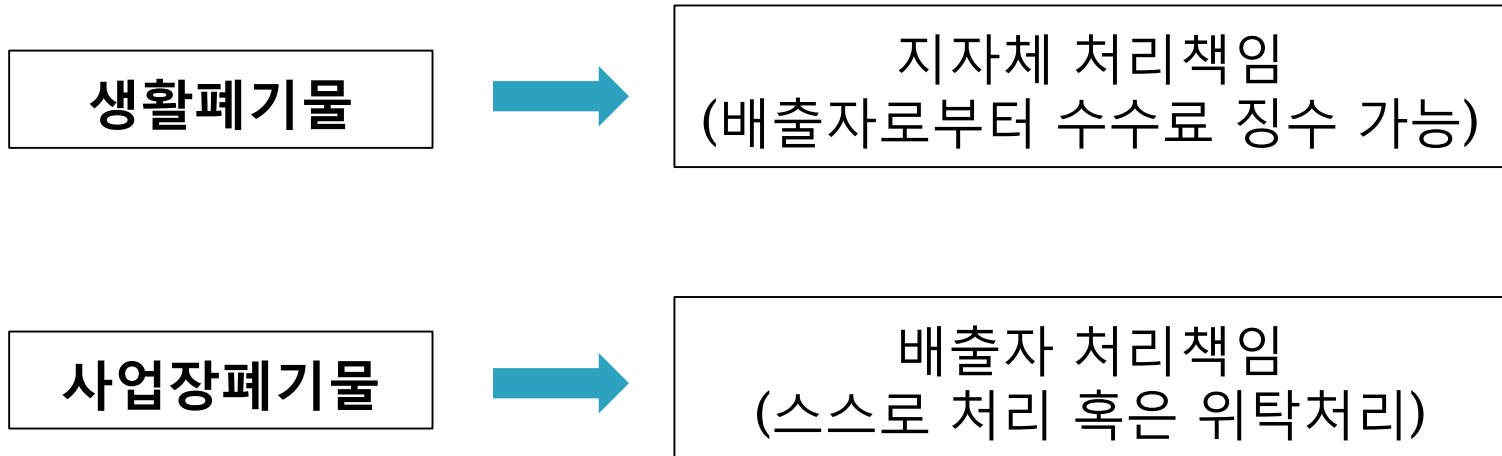
국민



- 청결유지 및 감량, 자원화 노력
-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의 건물, 토지의 청결유지 및 지자체 계획에 따른 대청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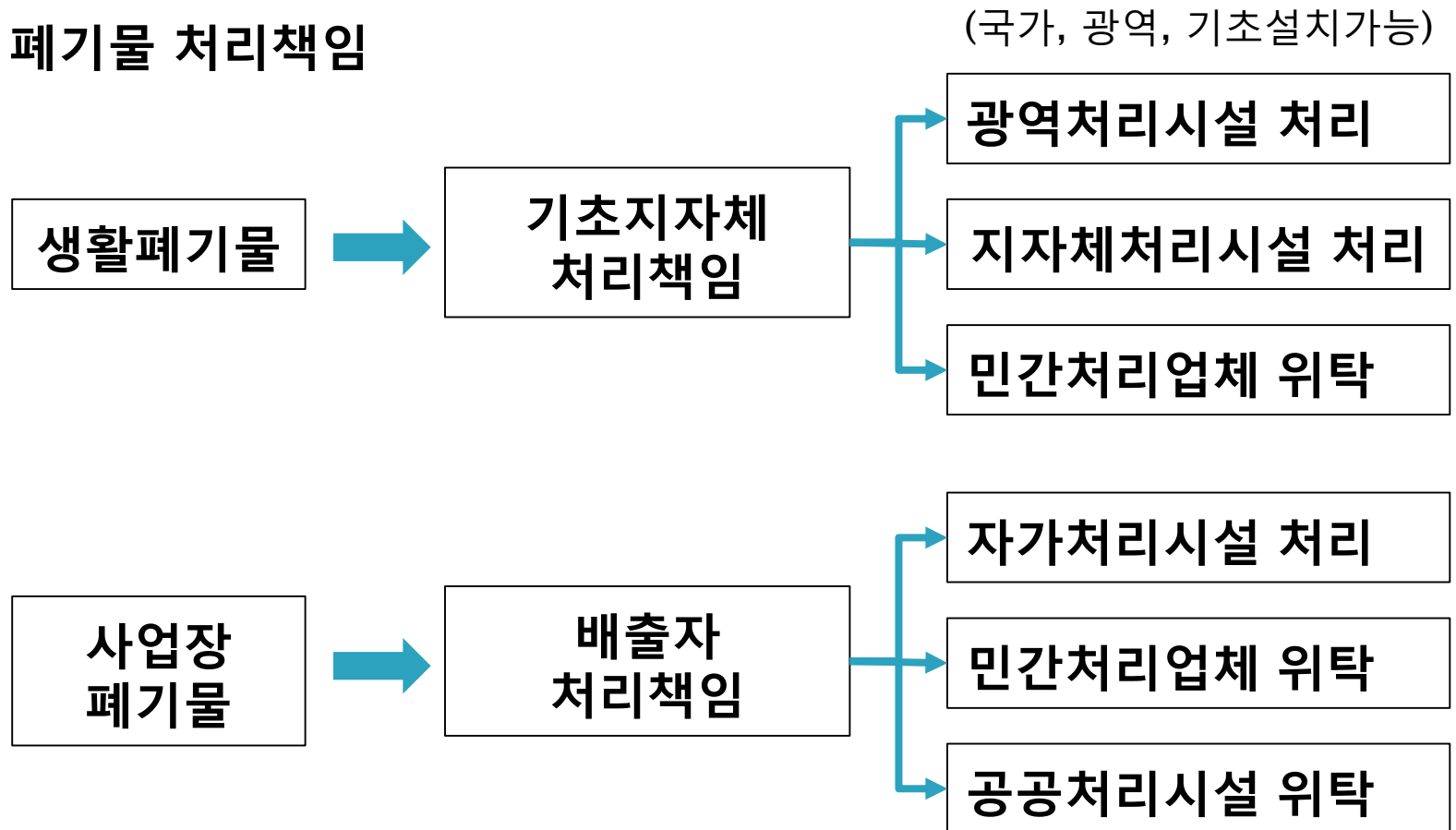
1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

3) 폐기물 처리책임(폐관법 14조, 18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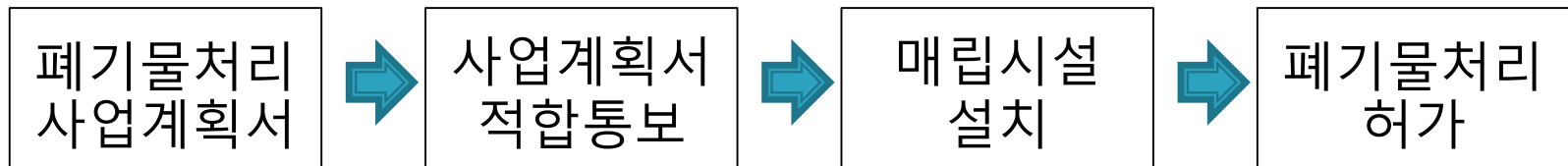
1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

3) 폐기물 처리책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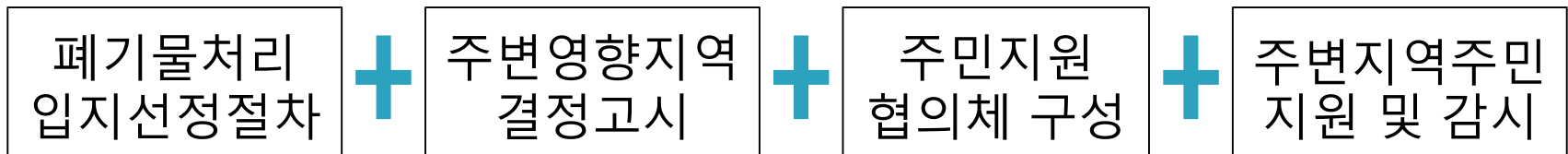


1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

4) 매립시설 설치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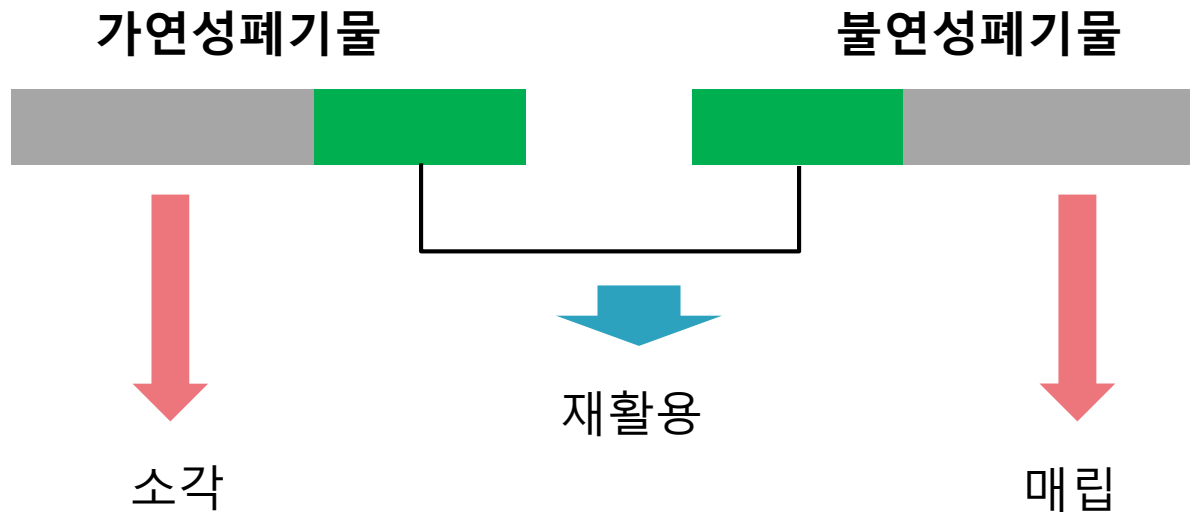
<폐기물처분업 허가절차 :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는 별도>



<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: 300톤/일 이상,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매립시설에만 적용>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1) 사업장폐기물 관리우선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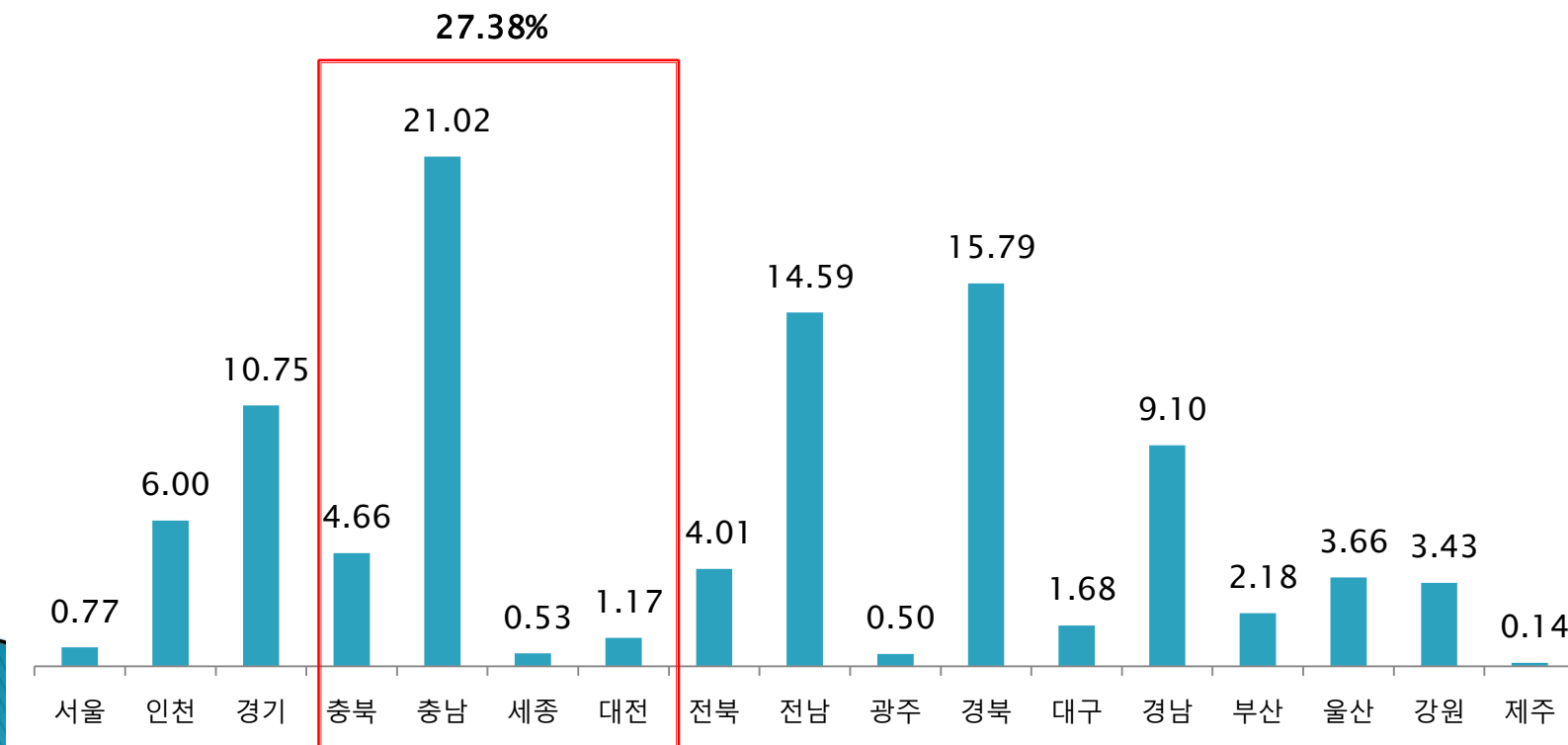


폐기물관리 우선순위 : 재활용 > 소각 > 매립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2)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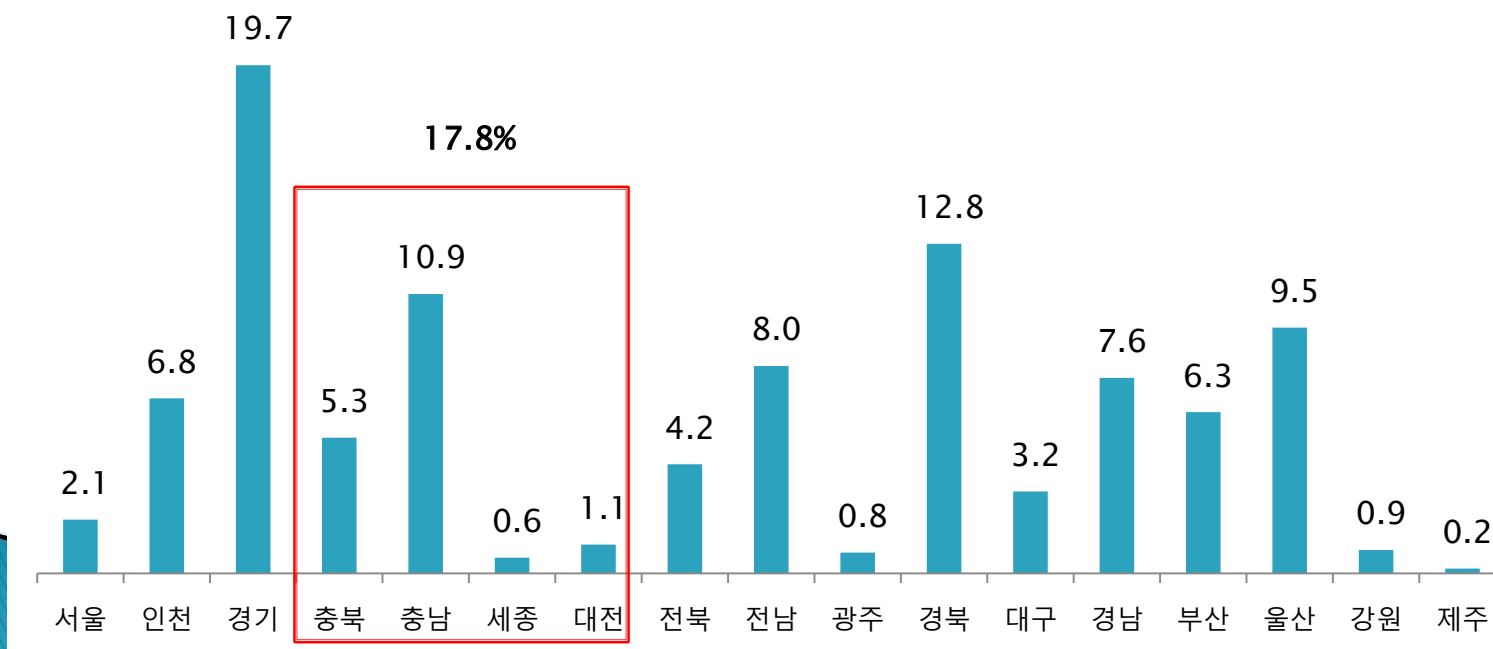
-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49,815톤/일이며,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31,491톤/일로 전국 최대

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2)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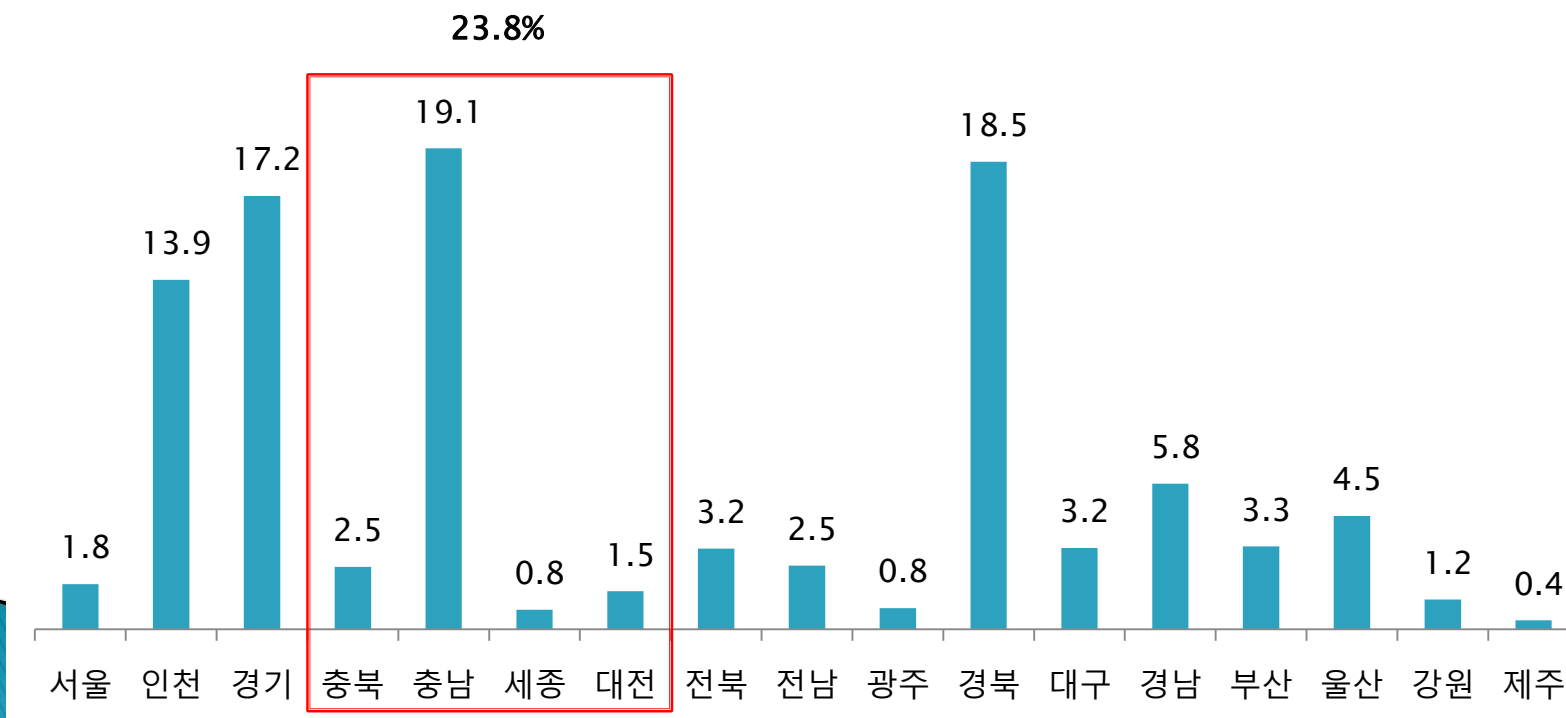
- 2013년 기준 사업장지정폐기물(의료폐기물 제외) 발생량은 11,993톤/일이며,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,301톤/일로 전국 3위

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3) 사업장폐기물 매립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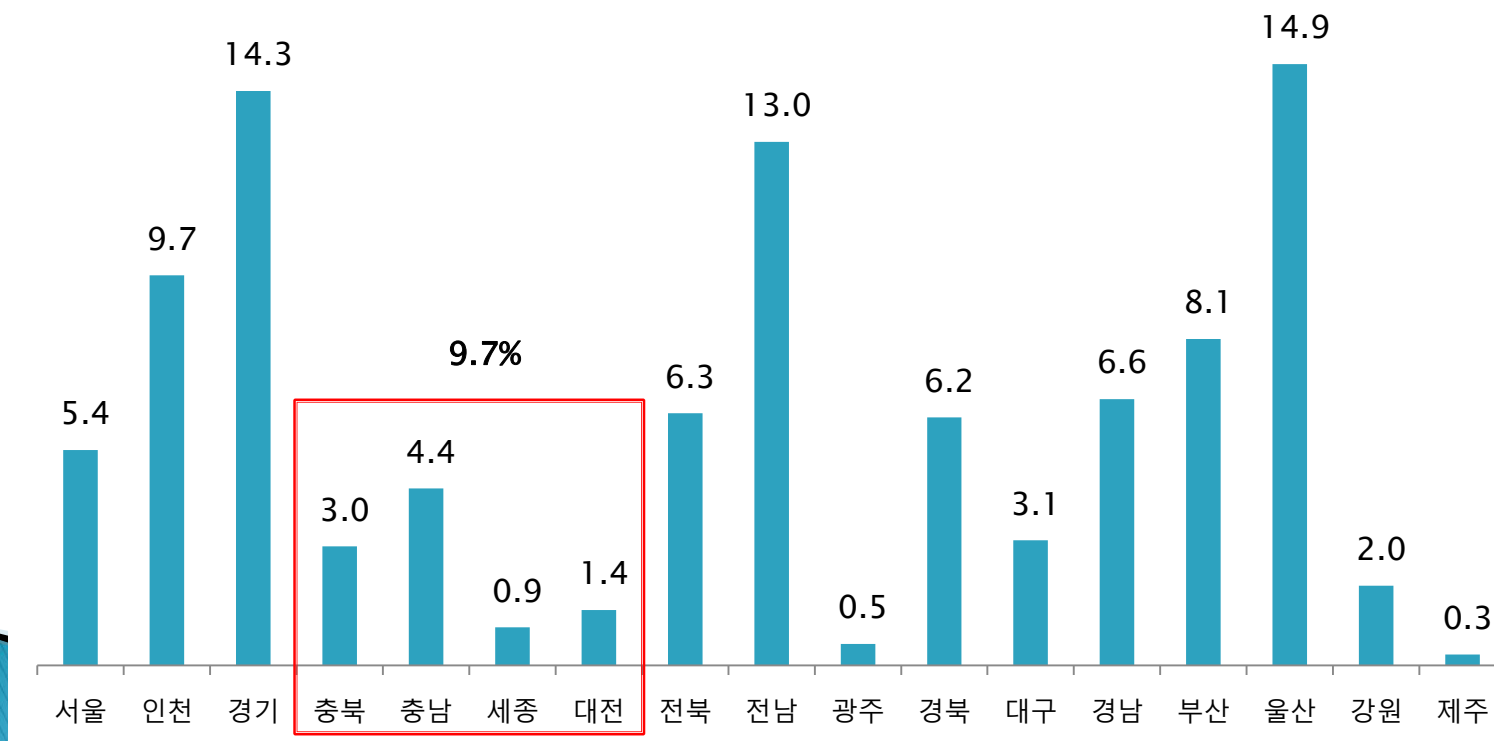
-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연간 매립량은 899만톤이며, 충남의 매립량은 171만톤으로 전국 1위

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3) 사업장폐기물 매립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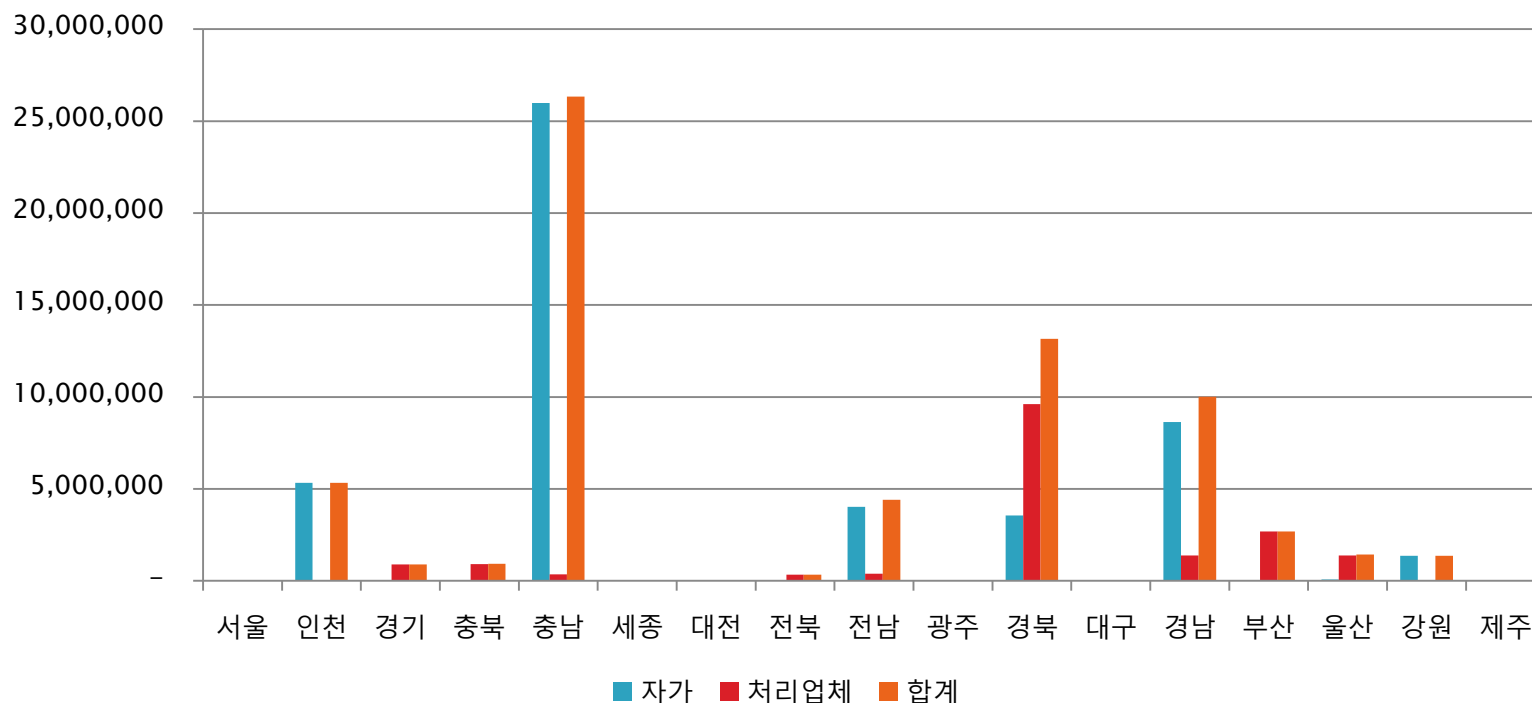
- 2013년 기준 사업장지정폐기물(의료폐기물 제외) 연간 매립량은 86만톤이며, 충남의 매립량은 3.8만톤으로 전국의 4.4%에 불과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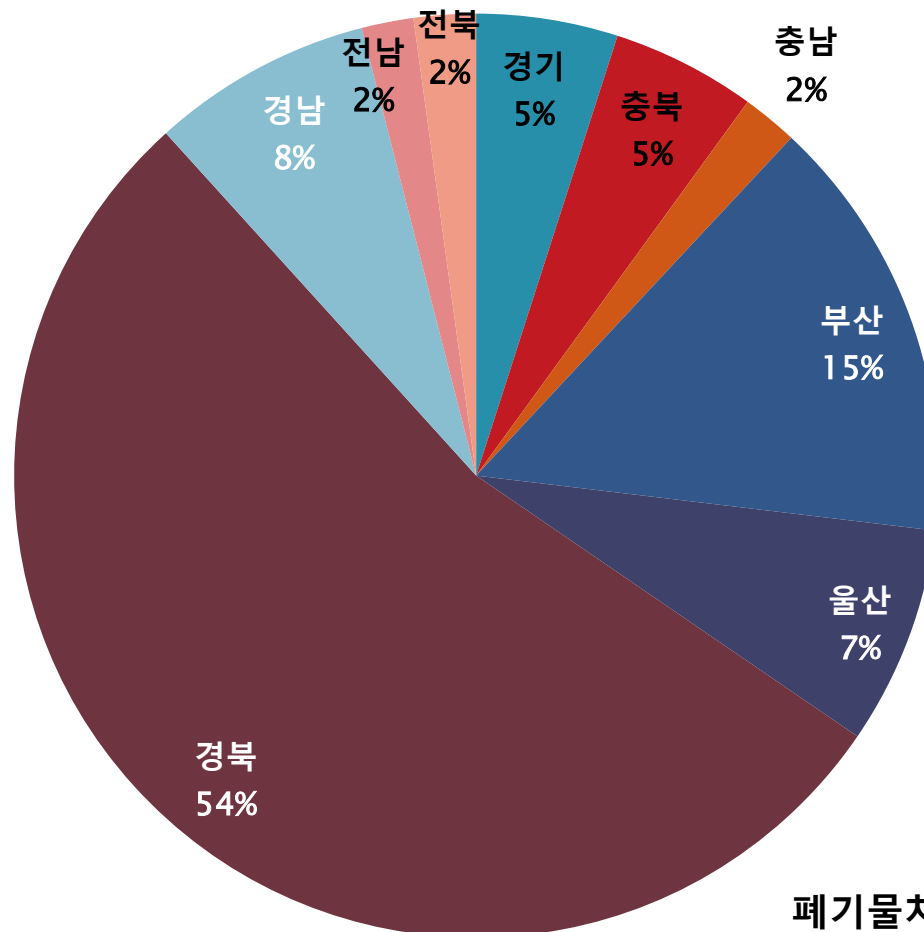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4)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

- 2013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용량 기준으
로 총 66,877m³가 남아 있음. (자가매립시설 73%, 처리업체 27%)

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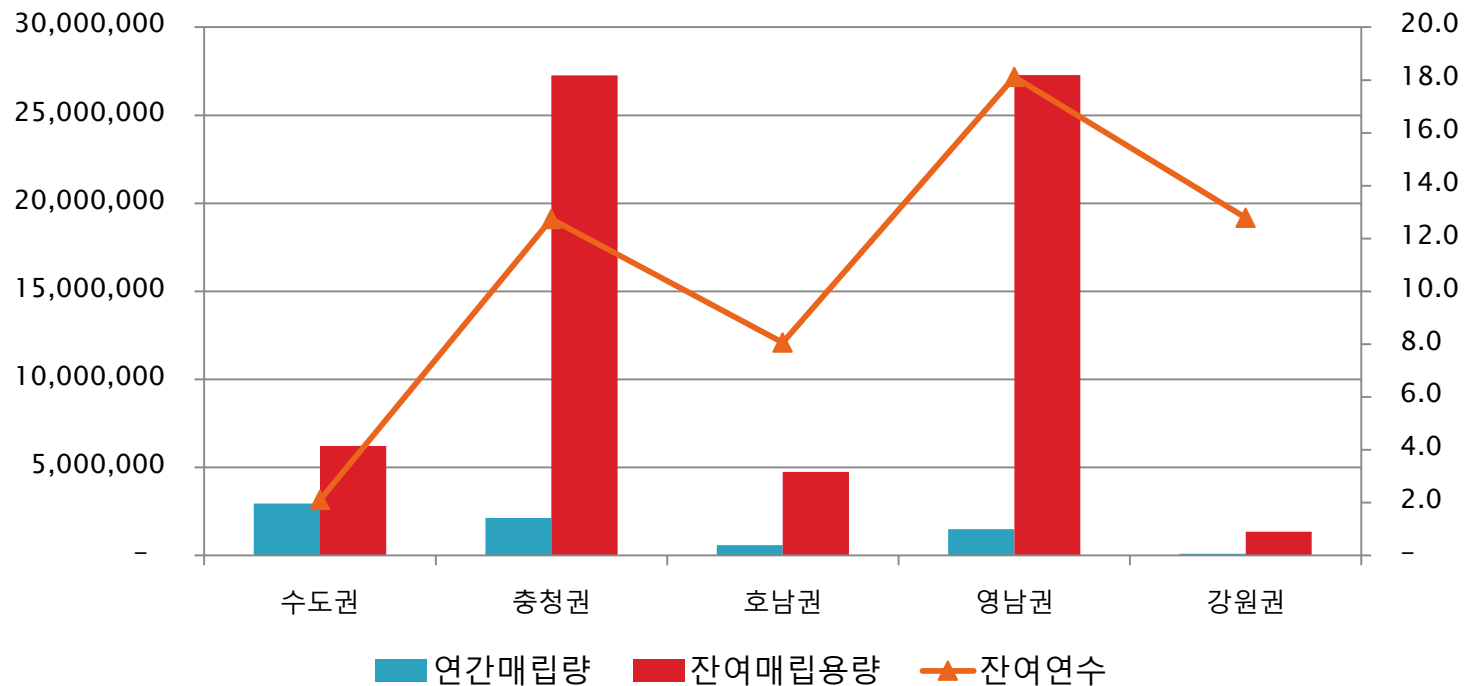


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 잔여용량
지역별분포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4)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

- 지역별 매립지 잔여연수(지역별 연간매립량/잔여매립용량)는 영남권 18.1년, 충청권 12.7년, 강원권 12.8년, 호남권 8.1년, 수도권 2.1년



2.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현황

5) 소결

- 충남지역은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매립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높으며,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배출 폐기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. 발전소 자체 매립시설 영향으로 자가 매립시설 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큼.
- 수도권 지역 매립폐기물 발생량 대비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이 매우 부족함. 수도권 지역 발생 매립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확보가 필요하며, 이 압력이 충청권에서 발생하고 있음.(물류 등을 감안할 때 충청지역이 민간처리업체 관점에서 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있음.)

3.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

1) 문제

-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은 오염원인자(배출자) 책임이며, 집합적 관점에서 배출지역 책임의 원칙으로 확장할 수 있음.
- 배출지역 책임의 원칙은 폐기물처리의 형평성(**환경정의**)과 환경성에 부합함.
- 향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 배출지역과 처리지역의 불균형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며, 사회적 갈등비용을 증가시킬 것임.

3.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

1) 문제

-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간 갈등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간 갈등조정이 될 수 있으며,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전환이 가능하지만,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사업자, 지자체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.
- 환경부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매립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영업범위 설정제한 금지규정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매립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대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.

3.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

2) 문제해결 방안

- **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공공매립시설 설치**는 현행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민간매립시설 설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효과가 떨어지며, 오히려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 혼재로 인한 혼란(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갈등발생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.
- 이 방안은 관련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며,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.

3.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

2) 문제해결 방안

-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은 허용하되, 무분별한 지역간 이동을 억제하고, 설치 및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.
- **절차적 정당성 확보**를 위해서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검토 전 주민정보 공개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.
- **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정당성 확보**를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감시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. 또한 지역간 이동관련하여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차등수수료(혹은 매립부담금 차등부과)

3.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공공성 강화

2) 문제해결 방안

- 매립지 사후관리 관련하여 '먹튀'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지 사후관리 기금의 인상과 현실화가 필요함.
- 매립지 사용 중 혹은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(붕괴 등의 사고, 침출수 유출 등)와 관련한 보험의 필요
-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의 분담 (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,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음)



감사합니다